

보도	2023.5.26.(금) 조간	배포	2023.5.25.(목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 장	이진아	(02-3145-8129)
		담당자	조사역	이상선	(02-3145-8121)
	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2팀	책임자	팀 장	김경환	(02-3145-8285)
		담당자	선 임	김유진	(02-3145-8526)

SOS! 불법사금융 피해, 1332(→3번)로 적극 신고하세요!
 - 「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(5.26일~10.31일)」 운영 -

주요 내용

-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는 '22년중 총 60,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·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. (피해신고 10,913건, 단순상담 49,593건)
 - 피해신고·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, 최고금리 초과,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증가(12.0% ↑)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이에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·다양화로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”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「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(23.5.26~10.31)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 - ①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, ②불법사금융 신속 적발·차단 및 ③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,
 -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·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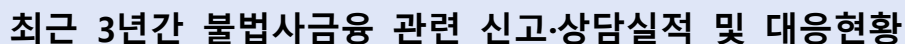
- ① **법정 최고금리를 초과**하는 부분에 대한 **이자계약은 무효**임을 명심하세요!
- ② 거래상대방이 **등록대부업체**인지 **확인**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!
- ③ 고금리,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**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**하세요!
- ④ 소액·급전 필요시 **정책서민금융상품**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!
- ⑤ **원금과 고수익을 보장**하는 투자권유시 **유사수신 행위**를 **의심**하세요!

I.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·상담 현황 (☞ 자세한 사항은 '붙임3' 참조)

- * '2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·상담 건 제외
(‘23.6월부터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가 가동 예정)

- **단순문의·상담은 49,593건으로 전년(50,061건)과 유사한 수준(△468건, △0.9%)이나 불법대부, 유사수신 등 피해(우려) 관련 신고·상담은 10,913건으로 전년(9,918건) 대비 10.0% 증가(+995건)하였고,**
- **특히 미등록대부, 최고금리 초과,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(10,913건)가 전년(9,918건) 대비 12.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**

- ※※ 햇살론, 최저신용자특례보증('22.9월~), 소액생계비대출('23.3월~) 등



<신고·상담실적>



<대응현황>

수사의뢰 등 455건

* 미등록대부, 불법채권추심, 유사수신 등

채무자대리인 4,510건

* 고금리·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
(우려)자에 대한 피해구제

서민금융상품 1,892건

* 햇살론, 최저신용자특례보증, 소액생계비대출 등

II.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 운영

-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불법사금융 수법이 지능화·다양화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“**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**” 후속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‘**23.5.26일부터 10.31일까지 「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**」을 운영*할 계획입니다.

* 현재 운영중인 ‘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’을 확대하고, 경찰청의 ‘민생 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(∼23.10.31.)’과 연계하여 운영

-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주지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.

☞ ‘(붙임2) 주요 상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’ 참조

- 「**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(23.5.26~10.31)**」 운영 중 ①**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**, ②**불법사금융 신속 적발·차단** 및 ③**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**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①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신고·제보를 접수하겠습니다!

-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 상담하고, 특별 신고·제보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(채무자대리인·소송대리인) 및 금융(정책서민금융상품 등) 등 지원방법을 신속히 안내 하며, 피해확인 시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수사의뢰 하겠습니다.

① 신고대상

- 최고금리(20%) 초과 고금리 대부 및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 행위
- 폭행, 협박, 심야 방문·전화,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
- 불법대부광고, 불법중개수수료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
- 대리입금, 내구제대출(휴대폰깡),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

② 신고방법 : (유선) ☎ 1332번(→3번), ☎ 112번(경찰서)

(온라인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

‘불법금융신고센터’(☞‘붙임4’ 참조)

②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적발·차단하겠습니다!

- 시민감시단*, '사이버 불법금융신고센터' 등을 통해 온·오프라인 불법금융광고를 적극적으로 수집·적발하고, 신속히 단속(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)함으로써 불법영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.

*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 300명(오프라인 160명, 온라인 140명)을 구성·운영

☞ '(붙임4)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·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' 참조

③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!

- 신·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* 및 신고·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, 피해유형 및 취약그룹별 특성**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.

* 최근 사례 :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,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등

** (10·20대) 대리입금·내구제대출, (30·40대) 고금리 등 불법대부, (30~60대) 유사수신 등

※ (붙임1)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

(붙임2) 주요 상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

(붙임3)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 신고·상담 현황

(붙임4)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·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 1

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

☑ **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세요!**

- ☹ 법정 **최고 금리(20%)**를 **초과**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

☑ **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하세요!**

- ☹ <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>를 통해 **등록대부업체 여부*** 및 등록시 제출한 **광고용 전화번호**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.

* 금융감독원 '파인' 홈페이지(fine.fss.or.kr) '제도권 금융회사' 및 '등록대부업체 조회'에서 확인
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(<http://www.loanconsultant.or.kr>)에서 확인

- ☹ **SNS**(카카오톡, 텔레그램), **오픈채팅** 등을 통한 연락은 **상대방을 특정**하기 어렵고, **추적이 곤란**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

☑ **고금리,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!**

- ☹ 대부업자(등록·미등록)로부터 **불법채권추심**에 시달리고 있다면 '**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**'을 신청하세요. (신청방법 '붙임4' 참조)

☑ **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!**

- ☹ 저신용자 등을 위한 '**최저신용자 특례보증**', '**소액생계비대출**' 등 정책 금융상품을 적극 **활용**하시기 바랍니다.

<자세한 사항은 **서민금융진흥원**(☎1397, www.kinfa.or.kr) 참고>

☑ **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시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하세요!**

- ☹ **다단계 방식**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우 **유사수신** 또는 **사기 가능성**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의심은 되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도와주세요!



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

- [전화 신고·상담] 국번없이 1332 (3번 선택)

- [인터넷 신고] www.fss.or.kr → 민원/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

* 세부 신고·상담 방법은 [붙임4] 참조

①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

☑ (22.12월 상담) 김모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대출○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 게시

-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(40만원을 대출, 일주일 후 60만원 상환, 연체 시 주당 12만원의 연체수수료 부과)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요구

☞ 실제 이자율 : 이자(20만원)÷대출원금(40만원)÷대출기간(7일)×365일=연 2,607%

- 일주일후 이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,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며 매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폭언 및 협박

💡 소비자 유의사항

-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·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,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(연20%)를 초과하는지 확인
- 이자율 계산 시 선이자 등 대출시 공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명칭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함을 명심
-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「채무자대리인 지원」을 신청하여 불법채권 추심에 적극 대응하고,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불법임을 명심

② 불법대출광고

☑ (22.10월 상담) 이모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*를 통하여 ○○저축은행과 햇살론 대출상담을 진행

*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서류 등을 징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등록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 수행

- A씨는 대출방법 안내, 금융회사 소개 등을 통해 대출승인을 도와주었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, 이에 이모씨는 A씨 명의 계좌로 상기 금액을 송금

💡 소비자 유의사항

-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,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

- 불법대출광고는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기관명, 로고 및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다수
 -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상 전화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,
 -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
- 또한, 대출의 중개·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

③ 유사수신

- ☑ (‘22.12월 신고) 정모씨는 ‘22.3월경 ●●투자그룹 리딩방 손실보상팀의 담당자 B로부터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며 당장은 현금보상이 어려우니 ▢▢▢코인으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음
 - 담당자 B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▢▢▢코인을 상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원금 손실시 매수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원금보장 약정서를 제공
 - 정모씨는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담당자 B의 말에 현혹되어 총 5,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
 - 이후 가상자산 가격은 매입가격보다 90% 이상 폭락하고 담당자는 연락두절

💡 소비자 유의사항

- 다음과 같은 경우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하고, 사업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
 -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·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
 - ② 가상자산, 블록체인, 핀테크,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

※ 최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

 - ③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(다단계)

1 신고·상담 현황

- '22년 중 「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」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·상담건수는 60,506건** 으로 전년(59,979건) 대비 527건 증가(+0.9%)
- 불법대부, 유사수신 등 ❶피해(우려) 관련 신고·상담이 10,913건으로 전년(9,918건) 대비 995건 증가(+10.0%)하였고, ❷단순문의·상담(49,593건)은 전년(50,061건)과 유사한 수준(△468건, △0.9%)

❶ 피해 신고 · 상담 : 10,913건 (전년 대비 10.0%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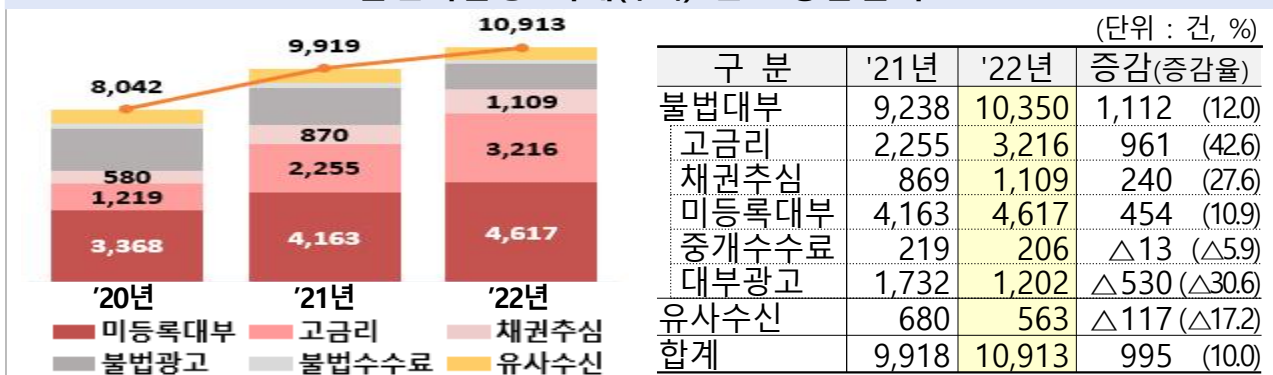
- '22년 중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(우려) 신고·상담건수는 10,913건으로 전년(9,918건) 대비 10.0% 증가
- **[불법대부 : 10,350건(+12.0%)]** 서민·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(4,617건, +10.9%), 법정 최고금리 초과(3,216건, +42.6%), 불법채권추심(1,109건, +27.6%) 등 불법대부*와 관련된 피해신고·상담이 크게 증가
 - **[유사수신 : 563건(△17.2%)]** 유사수신 신고·상담 건수가 감소하였으나 가상자산*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피해 관련 상담·문의는 전년대비 크게 증가(199건, +67.2%)**

* (주요 유형)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요구, 선이자 공제, 부당한 연체료 부과 및 본인 이외 가족·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등

*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아트테크, NFT 등 신종·신기술 가상자산 분야의 가격이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광고하여 투자자를 현혹

**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상담·신고 추이 : ('20) 99건 → ('21) 119건 → ('22) 199건

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 신고·상담실적



② 단순 문의·상담 : 49,593건 (전년 대비 0.9%↓)

- 단순 문의·상담의 경우 미등록대부업체의 비대면 불법대부 취급 과정*에서 정보제공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 상담이 증가(3,111건, +18.0%)하였고,

* 미등록 대부업자가 급전대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증, 사진 및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요구

-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여부*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상담도 크게 증가(627건, +25.1%)

*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연락이 두절되자 대포통장 개설 등을 우려하여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

세부 유형별 단순 문의·상담 현황

(단위 : 건, %)

구분	법규 및 절차 문의 등	개인 정보	대포 통장	서민금융 신용회복	기타 법률상담	계
'21년	46,559	2,637	501	243	121	50,061
'22년	45,648	3,111	627	136	71	49,593
증감 (증감율)	△911 △2.1	+474 +18.0	+126 +25.1	△107 △44.0	△50 △41.3	△468 △0.9

2 대응 현황

- **(수사의뢰)**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*

* 미등록대부,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377건 및 유사수신·불법금융투자 118건 등

- **(채무자대리인 지원)** 고금리·불법채권추심 피해(우려)자(1,238명 신청)에 대해 4,510건*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안내

* '22년중 금융감독원에 피해(우려)자 1,238명이 4,62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였고, 4,510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변호사 지원 실시

- **(서민금융상품 연계)** 상담진행과정에서 추가대출, 대환 등이 필요한 1,892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*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

* 햇살론, 최저신용자특례보증('22.9월~), 소액생계비대출('23.3월~) 등

붙임 4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·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

① 피해 제보·신고

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에서 제보·신고 가능

①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고금리 수취,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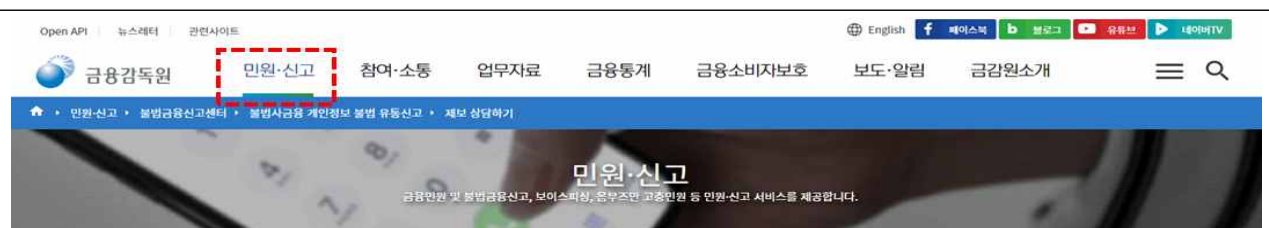
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spam.kisa.or.kr)로 신고

② 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·신고

③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

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신청 화면

1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



2)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

①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민원·신고	②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민원·신고	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민원·신고
민원·신고 +	민원·신고 +	민원·신고 +
e-금융민원센터 ☞ +	e-금융민원센터 ☞ +	e-금융민원센터 ☞ +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	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	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
<div>불법금융신고센터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보 상담하기 · 제보 상담내용 조회 	<div>불법금융신고센터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용안내 · 제보하기 · 제보내역조회 	<div>불법금융신고센터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용안내 · 피해신고 · 신고내역조회

② 피해구제 신청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에서 신청 가능
-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“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”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

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內 신청 화면

Open API | 뉴스레터 | 관련사이트

English | 페이스북 | 블로그 | 유튜브 | 네이버TV

금융감독원 | 민원·신고 | 참여·소통 | 업무자료 | 금융통계 | 금융소비자보호 | 보도·알림 | 금감원소개

민원·신고

민원·신고 +

e-금융민원센터 +
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

불법금융신고센터

- 자숙은행위법행위 신고
-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
- 증권불공정거래신고
- **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**
- 제도안내
- 신청하기
- 조회하기
- 투자의혹 불법대출 신고센터
- 회계무정신고
- 회계무정 익명신고

제도안내

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

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,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신청하기 | 신청내역조회

지원조건

○ 지원대상

- 미등록·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

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.

-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
-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
-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
- ④ 야간(저녁 9시~아침 8시)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
- ⑤ 가족·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
- ⑥ 가족·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- ⑦ 협박·공포심·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
- ⑧ 금전을 사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
- ⑨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게 추심하는 경우
-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